

## 쌀과 경수로, 그 올바른 대응

김영목

경수로기획단

### 북한 문제의 대두

**지**난 수년간 우리는 막연하나마 한반도가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갖고 지내왔다. 최근 우리의 관심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잇달아 생기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망명 사건들은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가능성을 그 현상 자체로 예고해주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직접적인 남북 대화는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사실상 여러모로 상대해야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지내왔다. 특히, 1995년 한해는 경수로 협상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논란도 많았고, 쌀 지원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다. 최근에는 잇달은 망명 사건 등으로 북한의 체제와 장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남북간 대치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해온 우리로서는 앞으로

우리의 정치·경제 생활 전반에 피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의 전개에 대해 다소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경수로 문제나 쌀 지원 문제 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다루어온 데 있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對북한 인식이 보다 경화되고,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한 우리의 준비와 대응들이 제약되는 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편파적인 관찰일까?

경수로 협상이 진행되었던 작년 내내 우리 언론은 ‘한국형 실종’, “우리는 돈만 내는 봉인가”라는 두 가지 테마로 경수로 협상에서의 정부 입장 또는 경수로 협상 자체를 비판하여왔다. 말이 비판이지,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집합적으로 모인 엄청난 열기는 정상적인 시시비비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

쌀 문제에 대한 언론과 세간의 비판도 매우 거센 것이어서, 지난 여름 지자체 선거에서 집권당에 큰 감표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

었다. 그후 쌀 지원은 아주 인기없는 품목이 되어버렸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데에는 주로 북한 자신의 과오, 실수 그리고 의도적 기만 행위가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껍질을 벗겨가면서 숨은 의도를 설명해주면, 이들은 “북한 최대의 적은 바로 북한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설명에 수긍한다.

그러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발전소의 공급을 위한 ‘공급 협정’이 타결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경수로 공급을 위한 일을 차분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 저한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식량 지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연 예측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북한이 경수로가 실제로 지어진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특히, 경수로로는 우리 발전소가 공급되고 우리 기술진과 인력이 들어가서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그런 일을 허용할까? 또 과연 북한에 식량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 북한은 먹고 살 만큼 식량을 감추어 놓고도 단전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식량을 지원 해주지 않는다면 혹시 무슨 큰 변고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준비를 강화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위협하고 있는데 쌀 같은 것을 주어야 하는가? 과연 북한

은 곧 종말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상당 기간 존속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인가? 명쾌한 대답은 찾기 어렵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가 요즘 역서들을 뒤적이거나 역술인들에게서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데 있어, 작년에 진행된 경수로 협상의 내용과 쌀 지원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한국형 경수로

지난해 내내 국내 언론은 경수로 협상에 대해 의혹과 불신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해 전반은 ‘한국형’과 우리의 중심 역할이 관철되느냐가 우리 걱정의 주종이었다. 이 문제가 어떻게나 걱정이 되었던지 연일 언론들은 “우리가 내는 돈으로 왜 미국형을 사주느냐”, “우리가 붕이냐”, “왜 미국 기업에다 뺏기는 장사를 하고 있느냐”고 일반 국민들의 걱정과 불만을 재촉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북미 협상을 앞두고는 갖가지 분석과 우려가 대두되어 우리측의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어렵게 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고, 미국과의 평화 협정 체결 요구 등을 들어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전

문기들은 북한이 경수로에 관심이 없고, 특히 한국형 경수로를 받을 리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정전 체제의 변화, 대미 관계의 진전을 통한 한미 관계 차단 등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들을 내어 놓았다.

북한은 3~4월간 협상에서 한국형을 수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공급되는 경수로가 어떻게든 미국형이라는 외피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하고 있었다. 북한측은 4월 21일이 지나면 핵동결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우리가 핵증기 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을 포함한 발전소 전반을 설계하고, 책임 건설한다는 사실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동의가 필요했다.

6월의 쿠알라룸푸르 협상은 그야말로 벼랑 끝 밀기(brinkmanship)라는 말이 실감나는 지루하고 힘든 협상이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재처리 위협에 맞서서 한미 양국은 천저히 원칙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자세와 대비를 가다듬어야 했다.

4월부터 6월까지 협상 기간 중 북한은 내내 남조선형을 강요하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겠다고 위협하여왔다. 우리측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도 대비해야 했다.

북한측은 협상의 막바지에 와서야 KEDO

가 爐型을 선정하며(한국측이 설계하는 표준형 인정), KEDO가 주계약자를 선정(한국 기업의 주계약자 수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또 북한측은 경수로의 공급과 관련, 앞으로는 미국 정부가 아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협상·협약한다는 데 동의했다.

6·13 북미 공동 발표문은 북한에 공급되는 원자로가 한국형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경수로 사업은 각각 두 개의 냉각재유로를 가진 약 1,000 메가와트 발전 용량의 가압 경수로 2 기로 구성된다. KEDO가 선정하는 경수로의 노형은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 생산 중인 노형으로 한다.” 한국 표준형 경수로는 미국 CE社의 S-80을 ‘기초’로 하여 개량되어 기술적·법적으로 독립화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기술과 설계에 기초한 제품인가를 중시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미국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미국형 원자로는 포기하며, 미국의 기술을 기초로 하지만 독립적으로 개발된 한국형을 수락한다는 뜻이었다. 즉, 미국의 원기술에서 개량되어 나온 것이라는 표현이 북한의 체면을 어느 정도 바꾸면서 실제로는 한국형을 수락케 하는 키 워드(Key word)가 되는 것이었다.

미·북한 합의가 발표되던 6월 13일, 서울에서는 별도로 한·미·일 KEDO 집행이사가 모여, KEDO는 KEDO 설립 협정이 정한

바와 같이 한국 표준형 원전을 턴 키(TURN-KEY)로 북한에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부총장으로 하여금 韓電을 주계약자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를 韓電과 갖도록 지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김대통령에게 구두와 친서로서 알려왔다. 이로써 한국 표준형 원전의 공급 그리고 한국의 중심 역할에 대한 협상은 일단락 되었다.

협상이 결렬되어 북한이 재처리에 착수하는 사태가 왔다면, 한미 양국은 대북한 제재로 움직여야 하고 북한은 1994년 여름처럼 다시 북바다 전쟁 불사라는 태세로 나왔을지도 모른다. 우리측의 단호한 협상 전략은 국가 안보상의 문제까지를 염두에 둔 그야말로 진담나는 강공 전략이었다. 북한에 대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공하면서도 우리의 안보가 걸려야 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모순된 남북 관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형과 한국 중심 역할이 훼손되거나 실종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떠들썩하게 일본에 취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형'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고, 애매한 표현이므로 한국형이 안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한국형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KEDO가 爐型을 선정한다고 했고, KEDO는 설립 협정과 결의문을 통해 한국 표준형을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형이 공급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공동 발표문 상의 기술적 설명도 순세계를 통틀어 올진 3,4호기 외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도록 했으므로 이분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측이 미국형이라는 외피를 씌울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구해온 미국 기업에 의한 설계 또는 설계 변경 요구가 철회되어 삭제되었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간접적 표현이 아닌 '한국 표준형 또는 올진 3,4호기'를 수락한다고 명시하였다면, 그것은 더이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북한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미·북한 합의에 따라 9월 중순부터 우리측 대표들이 미일 전문가들과 함께 참가한 KEDO 대표단과 북한측간에 있었던 공급 협정 협상이 3 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12월 15일 타결되었다. 同협정에서 북한은 6월의 미·북한 합의에 따라 경수로 사업을 수락한다고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관계 조분은 경수로 사업은 "KEDO가 선정하는 노형(한국 표준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수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집중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부지 조사 가운데 3,4차의 조사부터는 사전 용역 계약에 따라 우리 韓電과 발전소 설계 전문 업체인 韓技(한국전력기술주식) 책임 하에 수행되고 있으며 약 30여 명의 기술진, 관계자 대부분이 우리측이며 미일측 인사는 2~3 명에 불과하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미국 기업의

P.C.를 담당하게 되므로 우리 주계약자 韓電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고, 무리한 설계 변경 지시 등을 하여, 결국에는 한국형이 공급되지 않고 미국형이 공급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알리있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원전 공급에 있어 계통 설계가 바뀌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 표준형이 공급되지 않게 되는 사태가 되면 북한에 대한 경수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북미 기본합의문」의 불이행 상태를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미·일 3국뿐 아니라 북한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P.C.를 지나치게 적대시하고 우려하는 것은 대북 경수로 제공 사업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추구해나간다는 큰 전략적 목표 하에서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대기업들간의 이런 경쟁 정도로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데서 기인한다.

한국 표준형 공급 및 한국의 중심 역할 이부에 대한 논쟁은 더이상 불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논쟁을 재연한다면, 우리 표준형의 실체와 기술력에 자해를 가하고 국내 관련 기관간의 협력 관계에 벽질을 하는 효과 외에 다른 효과는 없다. 오히려 북한측을 거북하게 만들고 자꾸 탄 생각을 하게 할 뿐이다.

경수로 협상을 둘러싸고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 한국의

중심 역할이라는 두 전제가 확보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너무 두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다 큰 과제 -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장기적으로 남북 협력 기초의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안전 유지 - 들을 간과하는 경향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또, 이러한 과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우리 파트너들을 마치 우리가 먼저 맞닥뜨려 싸워야 할 상대인 것처럼 몰아간 경우도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관리하고 갖가지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 쌀 문제

쌀 제공 문제도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측은 지난 6월 북한과 일본에 대한 쌀 제공 요구가 있던 가운데 북한측과 접촉, 우리 쌀을 받도록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쌀 수송선의 선원을 억류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것은 물론 이전에 납북한 우성호 선원도 송환하지 않고 우리에게 대한 비방만 계속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여론은 비등하게 되고 쌀을 제공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가혹한 비판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비판적 여론을 배경으로 집권당은 쌀의 대북한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름에 일어난 大수해 이후 북한이 국제적으로 요구해오는 식량 원조 요청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북한의 적은 북한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으로 연출된 것이다. 북한의 식량 위기를 평가해보고 대책을 논의해보자고 모이기로 한 하와이 한·미·일 3국 협의를 전후해 국내 언론은 “또 쌀도 KEDO판인가” 하면서 미국이 경수로뿐 아니라 쌀도 주려면 주고 마는 것인가 하는 논조의 비판을 가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미국 정부가 대외원조처(AID)의 예산으로 국제식량계획(WFP)을 통해 약 2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부 언론은 이라크에는 그토록 혹독하게 경제 제재를 늦추지 않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 잣대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경계심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내면에는 경수로 협상이든, 쌀 협상이든 북한에게 무엇을 준다는 사실이 무언가 석연치 않고, 혹시 미국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리잡고 있다.

어떤 미국의 분석가는 미국이 200만 달러 지원을 천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고, 또 어떤 논평가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한국 국민이 갖는 반감은

이해하나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결국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러나 200만 달러는 2,000~3,000 톤의 식량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 현재의 북한의 식량 사정 또는 전반적인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한·미·일 등 관계국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독자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하는 여러 가지 협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하는 조치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수로 문제이건, 쌀 문제이건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제의를 해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생각할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문제는 바로 우리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안주기로 하면 안주는 대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주면 주는 대로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을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측 분석가들은 한·미·일 3국이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바라고 있지 않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갖고 있는 적대감은 3국간에 반드시 일치된 조치를 끌어내지 않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대북 관계를 급속히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성은 우리에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 감정 속에는 북한을 적대시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무인가를 해야 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의무감도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는 1992년에 급격히 남북 관계를 진전시켰던 바 있고, 작년에도 북한에 15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으며, 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수로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그 목표에 따라 하나씩 가능한 일을 해나가려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태도가 될 논리적이고 때로는 모순되게 비취질 수 있다. 당사자인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은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좀더 의연하고 일관성있는 자세로서 우리 입장을 파트너들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의 우방국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논리와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일관성은 철저한 책임 의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 북한 문제의 본질

우리가 최근 수년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조금만 넓은 시야에 놓고 본다면, 북한의 핵 문제, 경수로, 쌀과 같은 문제들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귀찮은 종목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싫든 좋든 미국 등 우리의 우방국들은 물론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협의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수로 협상이든, 쌀 문제이든 국제적 수복과 잠이틀 끌어들이고 있는 문제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의 책임 의식과 동시에 국제적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북한이 일으키는 문제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고 있는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1994년의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최근의 잇달은 탈북·망명 사태들이 우리에게 변화의 가시성을 더해주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농업은 80년대에 이미 한계 상태에 와 있었으며, 부족한 식량을 주로 중국에서 얻어다가 메우고 있었다. 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연속되는 흉작과 곡물 수입 부진으로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식량 부족 상황을 겪

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 태부족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으로부터는 우호적 저가로, 중동 지역으로부터는 무기 수출 대금으로 원유를 도입하여 메우고 있었다. 북한은 1988년에 250만 톤의 원유를 도입했으나 1993년에는 경화 부족으로 136만 톤을 겨우 수입할 수 있었다.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관련, 북한은 80년대 중반에 구소련으로부터 440 메가와트급 경수로 4기를 원조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현재 북한이 수재를 핑계로 국제 사회로부터 대규모 식량 원조를 요구한 바 있지만, 사실 식량 부족 사태는 농업 구조, 기술 낙후, 농지 소진 등에 따른 저생산성으로 인해 식량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군비 증강에 편중된 자원 배분으로 인해 경화가 없어 식량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상가상적으로 1994년도에는 냉해로, 1995년도에는 수해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다만, 북한은 1995년도 수해의 피해가 200여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FAO, WFP 등 국제 기구는 100만 톤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은 수해로 인한 직접 피해는 수십만 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소련은 1980년 중반부터 내부 개혁을 지향하면서, 소모적인 위성국 관리를 정리해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위성국들에

대한 특혜나 원조를 대폭 감축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경제 발전을 최우선에 두면서 북한과의 거래를 상업 베이스에서 하자고 요구하고 나왔다. 이러한 두 후원국의 태도는 가뜩이나 산업 시설의 노후화와 기술 정체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구득하기 어려운 북한 산업의 가동률은 계속 급속히 저하되었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부터 내리 負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89년부터 본격화된 중·동구 국가들의 재탄생, 독일 통일 그리고 구소련 자체의 변화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심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구소련이 소멸하고 새로 탄생한 러시아는 구소련과는 아주 다른 대외 정책을 들고나왔으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이 제공한 군사·안보 상의 지원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구소련의 점진적인 손떼기(disengagement)와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 국제적 고립감 등에서 더욱 촉진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북한이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서 미·북한 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제반 상황이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에 대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중유와 경수로를 요구한 것은 북한식 국가 목표 설정



과 경제·에너지 사정으로 볼 때는 지극히 논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은 80년대 후반부터 對美 접근을 끈질기게 시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여왔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교섭을 통한 자본의 대규모 유입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北美 관계 개선을 규정하고 있는 「북미기본합의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1992년에 들어 소위 합영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행되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었다. 북한의 현 정치·경제 체제로는 외국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식량 분배와 경제난은 1995년도에 갑자기 불기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어온 분제이며, 앞으로도 계속 더욱 악화될 모습으로 우리와 국제 사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짐작은 탈북자·망명자 문제도 점점 빈번해지고 대규모화될 것으로 보아 큰 잘못이 없을 것 같다. 이는 앞으로 우리는 물론, 인근 지역 국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따라서 미·일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도 다양한 협의와 협조 관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그간 북한 정권의 대외 안보 정책을 볼 때,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전이 올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1995년 내내 정전 협정을 미국과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잠정 협정부터 맺고 미·북간 군사 공동 기구를 설치하자고 요구하고 나왔다. 북한의 이러한 공세는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를 이완시키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어떻게든 안전을 보장하고 행동의 자유를 넓혀 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양국간의 틈을 노리는 북한의 어떠한 기도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한반도 안보의 기본 전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미국 내에서도 자주 강조되는 것은, 북한의 오만과 무모한 행동을 막는 기초가 한미 동맹 관계이며, 결속이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안정과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차적 과제에는 어떠한 틈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측의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선정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치·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을 유혹하기 위해 벌이는 선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의 뜻을 따르고 지지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창의성있고 주도적인 논리와 대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은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사안의 선정, 시기 그리고 방법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다루어야 할 사안의 성격과 종류 자체는 이미 주어진 함수이며,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한미 공조

미국의 대외 정책은 전통적으로 '가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그 중심이 이동되어왔으나 대체로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즉, 어느 국가에 대한 특정 시점에서의 정책이 극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더라도 '가치'를 증시하는 전통과 세력이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과 구질서의 해소를 위해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했는데(이때 Vessey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특사로 방월함), 주변 여러 나라의 추측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1995년 7월에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 심지어 우리까지 베트남과 수교하고, 경협을 촉진하고 있는 마당에 美행정부는 실종 미군의 송환, 유해발굴과 관련, 미국 국민들의 소망을 풀어주고 의회가 정한 규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실제로 제네바 북미 합의 이후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한다고 한다. 북한은 적성국과의 교역법, 테러국에 대한 규제 등 각종 법률과 의회 결의 등을 통해 아직도 엄격한 규제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특히, '가치'를 중요시하는 미국 국민과 의회에 있어 북한은 늘 의혹의 대상이며, '국제적인 부법자'라는 이미지가 벗겨지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원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성사되고 있지 않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 취해진 경제 제재 해제는 자동 전화의 연결, 여행 편의를 위한 외환거래 규제 해제, 미국 철강 회사용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정도이다. 그간 북한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의 삭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는 겹겹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해제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현재 북한은 크게는 「적성국과의 교역규제법」과 「테러 국가 지정」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수출관리법」, 「해외 원조통제법」, 「무기거래규제법」, 「비핵확산법」, 「Jackson-Vanick 수정안」 등에 의해 미국과의 각종 교역과 원조가 규제 또는 금지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충분히 활용, 우리의 안보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가속시켜왔다. 우리는 세계적인 리더 역할을 해온 미국과 지난 반세기 가까이 절쳐 상호 입장을 조율해가면서, 중요한 도전들을 대처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협조해왔다. 다만, 최근의 경향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보다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욕과 능력이 급속히 증대된 것과는 상관 관계에 있다.

미국은 세계적 문제들을 다루어가는 데 있어 날이 갈수록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이다. 경제 무역 규모로도 그렇고 전통적인 안보 협력 관계로 봐도 그렇다. 영·독·불 등 NATO의 중요 맹방에 못지 않게 중요한 파트너이다. 미국으로서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나누어야(share) 할 것이 많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있어 갖는 파장을 생각할 때, 한국이 파트너로서 하게 될 역할과 전략적 선택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다. 우리가 문제를 조금만 더 큰 시각에서 보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전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연하게 대응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자신있고 의연한 자세는 상대방인 북한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관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파트너들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 신뢰하고 지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한국과 북한의 과제

현재의 북한 정권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비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선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또 내재적인 모순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모순된 행동을 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융통성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 자신에게 손실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의 자신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결국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북한이 이러한 상식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북한을 대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북한이 엄청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전략으로 북한을 대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의 성찰과 고민, 그리고 인내를 요구한다. 북한 정권은 구소련이 개혁을 하다가 소멸하고, 현재의 러시아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선불리 개혁을 하면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면서 주체 의식을 더 한층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 저기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더이상 허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정책이 자신을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가 북한 내에 강온파가 있느니, 군부가 강경하고, 테크노크라트는 실용적이라느니 하는 분석을 해보는 것은 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이 처한 모순과 고민의 규모를 놓고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사람의 마음도 아침과 저녁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층 또는 북한 주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여서 개방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상당 기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안전 격납 용기를 더욱 튼튼히 강화하고 차분히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면서, 갑자기 크게 나타날 지평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1989~92년까지 세계 질서의 대변화 과정에서 미국과 구소련이 주고 받았던 상호 반응, 독일의 통일 과정 등은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구소련에 대해 군축뿐 아니라 지역 안보, 인권, 양자 문제 등 4대 현안이 연계되어 협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면서 인권, 이민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화를 유도했다. 구소련은 대내외적 해체 과정과 여러 가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과 서방의 경고에 동의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대혁명의 드라마 속에 참혹한 대형 유혈 사태는

없었다.

구서독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속도로 구소련군을 신속하게 구동독에서 철수시키고, 구질서 잔재 청산을 위한 4국의 협력을 확보했다. 그렇다고 구서독은 구서독 내의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부 유럽에서 대규모 감군을 계획한 미국 정부에 제동을 걸어 감군 규모를 축소시키고 중부 유럽에서의 급속한 힘의 공백에서 빚어질 수 있는 통일독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적대감의 대두를 방지했다. 구소련은 통일 독일의 나토(NATO) 잔류에 동의했다.

소위 '2+4' 라는 국제 협의의 공식(formula)은 통일을 위한 역기능을 하지 않고 순기능을 했다. 당시의 서독 정부에게 당사자 해결 원칙을 포기하고 외세와 야합했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 막대한 군사력과 도그마에 대해 지배되고 있는 체제가 내부적으로 약해질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선례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남북한 양쪽의 국민을 위해서 평화를 관리해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큰 책임감과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이다. 현재 한반도의 장래가 평화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주변국들은 아무도 없다.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을 지나치게 주저할 필요는 없다. 

# 〈漫評〉 15



“江건너 불이 아닙니다!”